겉도는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판에박은 재개발…구도심 인구감소 여전

정비 지구 137곳…민자에만 의존 지지부진

공공투자 통한 노후 주거지 개선 집중돼야

광주시가 민선 5기 핵심 시책으로 도시재생을 꼽아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관련 용역 발주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심 외곽 택지개발과 구도심 소외 정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고, 빈 사무실과 건물이 양산되고 있는 구도심 일대를 되살리자는 것이 이 시책의 핵심이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에 있다.

하지만 과거 광주시가 내놓은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화려한 상징물 설치나 디자인 강화,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투자, 사전 주민 참여 배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민선 5기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단독주택 및 아파트에 고층아파트를 설립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몇몇 단지가 들어섰지만 동구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정책은 '실패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인구 유입을 민간 투자에만 맡기고 공공예산이 상업지역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만 집중되고 있어 시책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거지역 몰락 외면하나='2010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미흡과 노후 불량 주거지 등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37곳에 이른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8.76%에 불과한 12곳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42곳(30.65%), 구역이 지정된 곳이 26곳(18.98%) 등에 달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시공업체를 구하지 못해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을 검토중이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인 초기단계의 정비예정구역도 57곳(41.61%)에 이르고 있다.

30~4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과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불경기 속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거주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도시 경관은 물론 지역의 특징, 정서가 사라지고 있으나, 구도심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이율배반적인 결과만 낳고 있다.

따라서 민선 5기 광주시의 도시재생 시책은 이 같은 과거 시책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투자를 통한 노후 불량 주거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외관보다는 내실 갖춰야=도시 재생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앞서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집행단계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모범사례로 강조하고 있는 북구 문화동 시화마을 조성에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오랜 기간 직접 마을 조성에 참여하면서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장기간 보류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민간 투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비를 확보해 공공투자를 선행,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범주 내에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각종 건축 및 토목 사업 등 각 실과 및 산하기관 에 분산돼 있는 사업과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구도심의 주거지역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도심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사람도 없는데 화려한 가로등과 상징물만 세우면 그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며, 구도심에 대한 인구 유입이 모든 도시재생 사업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낮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 인사청문회 끝내고 오늘 본회의 표결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달 30일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총리 적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완료하고 내달 1일 오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견해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반대 당론까지 채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고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 경과보고서 채택 뒤 본회의 표결을 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청문회에서는 조카 운영 기업에 대한 감사 무마 의혹,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봐주기 감사',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자뿐 아니라 김 총장과 은진수 감사위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 조목조목 해명했다.

동신대 특혜 의혹과 관련, 이날 동신대 허기택 산학협력단장이 증인으로 나와 특혜 지원 금액이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반박했으며, 김 총장은 "동신대는 시댁의 대학인데 제가 못된 며느리가 됐다. 친정 문제로 부정한 학교처럼 발표가 돼서 제가 시댁에 대해 면목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금강산관광 연계 고수땐 이산가족 상봉 불발 가능성

남북 오늘 세번째 실무접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양측 적십자간 세 번째 실무접촉이 1일 개성에서 열리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양측은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4일 두 번째 접촉에서 사실상 당국간 접촉까지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우리측이 상봉장소로 제안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동결·몰수 조치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금강산지구 내 동결·몰수 조치는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금강산지구 내'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24조치 등으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남측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빌미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관철해 5·24조치를 무력화하는 한편,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측에 요구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대응 원칙을 스스로 깨는 셈이 된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른바 '5·24조치'로 일부 인도주의적 사안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가 차단돼 있고, 이를 풀기 위해 정부는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를 고려할 때 상봉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 있고, 또 남북관계를 계속 경색 국면으로 방치하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 정부 내에는 북측의 요구가 '어불성설'이라는 기류가 더 많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불응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집할 경우 최악에는 1년여 만의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남북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남아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다. 북한 스스로도 먼저 제안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후계 안정화를 위해 대외·대남 관계에서 갈등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일정(10월21~27일)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간차원 이산가족상봉 비용 1명당 589만원

2005년 비해 38% 늘어

민간 경로를 통해 제3국 등에서 북한의 친인척을 만나는 상봉비용이 2005년 425만원에서 지난해 589만원으로 164만원(38.5%)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난 2005~2009년까지 5년간 민간경로를 통해 북한 친인척을 만난 이산가족상봉자들이 제출한 보고서 2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상봉은 1989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시작돼 주로 해외동포와 민간단체를 통해 제3국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정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로 1인당 평균 상봉비용은 2005년 425만원, 2006년 465만원, 2007년 418만원이었다가 2008년 539만원, 지난해 589만원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상봉 주선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도 증가해 2005년 평균 180만원에서 2006년 184만원, 2007년 174만원, 2008년 220만원, 지난해 257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상봉 건수는 비용이 오른 데다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05년 136명, 2006년 117명, 2007년 96명, 2008년 46명, 지난해 25명 등이었다. 홍 의원은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상봉 확대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을 위해 세심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